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24. 11. 1.(금)

자료문의 : 형사4과
전화번호 : 02-3480-2733
주책임자 : 형사4과장 박지나

한국피해자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대검찰청 추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대검찰청(여성·아동·소년 전문검사 커뮤니티)은 '24. 11. 1.(금) 대검찰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2024년도 추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최근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나도 모르게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주요 발표내용
 - 1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라는 주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실제 겪는 불안감과 공포심 등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발표가 이루어졌고,
 - 2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법제, 피해자지원 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실효적 법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앞으로도 검찰은 학계와 실무의 소통을 확대하여 실효적인 범죄 대응 및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I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4. 11. 1.(금) 14:00~18:00, 대검찰청 NDFC 2층 베리타스홀

● 참석자

- (사)한국피해자학회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회원, 여성·아동·소년 전문검사 커뮤니티 회원 등 검찰 구성원 등 70여 명

● 프로그램

◆ 제1부 <사례 발표>

사회 :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 - 오정숙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 제2부 <주제 발표>

사 회 :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

발표(1):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및 주요 특징 - 강지명 (경상남도교육청 사무관)

발표(2):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 -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

발표(3):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

-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제3부 <종합 토론>

사 회 : 황태정 (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

토론(1): 윤효정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토론(2):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토론(3): 신상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토론(4):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토론(5):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

토론(6):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대검찰청은 한국피해자학회와 함께 '22. 4. 「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황과 과제」, '22. 11. 「스토킹 범죄와 피해자 보호」, '23. 4.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24. 4. 「변모하는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 (오정숙 사무처장)

- 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들이 겪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영상물 삭제 지원,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 경제적 지원 등 실제 지원 사례들을 소개함

- ▲ (디지털 성폭력 상담센터) 피해영상 삭제, 월 1회 진행 경과 공유
- ▲ (스마일센터 연계 심리상담) 피해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실시
- ▲ (보호소) 갑작스러운 범죄피해로 임시 거처 필요시 숙소를 제공하여 피해회복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 (경제적 지원) 사건 후 퇴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 ▲ (재판 모니터링 진행) 재판 참관을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재판 모니터링 진행 후 필요한 내용 공유

▣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및 주요 특징 (강지명 사무관)

-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딥페이크 기술의 대중화에 따른 접근의 용이성과 성교육의 미흡, 왜곡된 성소비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희 및 다른 음란물 확보 수단, 범행을 통한 공동체 소속감 획득, 명예훼손 동반 등의 특성을 나타냄
- 한편 범죄피해연구에 따르면 '불안과 두려움'은 삶의 만족도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요소인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피해 유형으로 행위 규범에 기술하는 등 '행위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기술 입법체계 도입이 필요함
- 또한 인공지능 영상 합성 구별기술 개발 지원, 피해영상물 검색·삭제를 위한 딥러닝 자료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완화 등도 개선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 (류부곤 교수)

- 현행 법제는 최근 신속한 법개정으로 형사처벌의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으나, 급격히 확산하는 범죄 양상을 감안하면 **실효적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음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하여 도입된 **위장수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전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수색이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위장수사)**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하고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등을 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법
- ▲ **(온라인 수색)**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수사기관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IT 시스템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대상시스템의 이용을 비밀리에 감시하거나 중요 저장매체의 내용을 열람 및 수집하는 수사 방법
- ▲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진 범죄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그러한 실행행위를 적발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수사 방법

-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신속한 정보제공,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생성형 AI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지원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전윤정 입법조사관)

- 현행 피해자 지원 체계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라고 함)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음

- 현행 법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영상물 삭제·차단을 명령하고, 이에 따라 인터넷사업자가 영상물을 삭제하는 구조로 **디성센터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부족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등을 수행하기 어려워 피해자지원 체계에 문제가 있음**
- 이에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긴급 삭제·차단 제도 도입, 수사·행정·기업·교육 분야의 정부조직을 포괄하는 상시적인 디지털성범죄 전담기구 마련,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다페스트 협약(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 '01. 11.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성안으로 '04. 발효된 사이버범죄 관련 최초 국제조약으로, 45개 회원국 및 31개 비회원국 등 76개국 비준
- ① 사이버범죄 등의 범죄화, ② 증거수집을 위한 형사절차 도입, ③ 협약 가입 절차 규정 등으로 구성, 가입국 간 신속한 국제 공조수사체계 구축 명시
- 해외 소재 증거의 신속한 보전 및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는 '22. 10. 가입 의향서 제출,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등 절차 추진 중

III

향후 계획

- 검찰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범죄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